"금리 인하 속도조절… '인하·동결 반반' 조건부 기조 유지"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인하 우위 깨지고 3대3 전망 균형
"정책 전환 아냐" 조건부 시나리오
환율 쏠림·해외투자 과열 우려
부동산·가계부채 금융불안 부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3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이 인하와 동결이 3대 3으로 갈리고, 환율·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폭 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 인하 기조 유지하되 '속도조절'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향후 3개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인하와 동결을 절반씩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 중 3명은 3개월 후에도 2.50% 수준 유지를, 나머지 3명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 인하 우위(인하 4명, 동결 2명)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대 3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이 읽었던 '연속 인하 기대'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다만 이 총재는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논의할 때 어느 누구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신 분은 없었다"며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일축했다.

성장 여건에 대해 이 총재는 반도체·IT를 뺀 비IT 부문의 성장률을 내부 계산 기준으로 "약 1.4% 정도"로 제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웃풋 갭(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차)이 언제 0에 근접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모델을 보더라도 현재는 의미 있는 마이너스"라며 "아무리 빨라도 2026년 말~2027년 초, 늦으면 2027년 말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 금융안정 리스크 부각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제는 환율과 국민연금, 해외투자 쏠림이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 "레벨 자체도 중요하지만,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게 있고 그게 우리나라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면이 우려된다"고 했다. 과거처럼 외채·은행 건전성 위기 국면은 아니지만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담을 경계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부근까지 오른 것에 대해선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 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하거나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고환율이 오래 지속되면 수출업체 일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수업체·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된다"며 "해외투자로 장부상 수익이 크게 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환율이 되돌아올 때 실제 수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개인과 세대 간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환율의 한 방향 움직임·쏠림 자체를 금융안정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둘러싼 '동원·볼모'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환율이 절하될 때 장부상 수익률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나중에 가져올 때 수익률까지 고려해 헤지 전략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 안에도 환헤지 여력이 있지만, 손실 책임 부담 탓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선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금융안정을 감안하면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하를 통해 성장을 더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환율·부동산·가계부채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히 종료됐다 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데이터에 기반한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며 "내릴 가능성도, 동결 가능성도 모두 열어둔 조건부 전망"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외국인 韓주식 투자절차 간소화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새로 마련

정부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정비
개설·배당·보고 절차 전면 명확화

정부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계좌개설 방식부터 주주권리 배정, 보고 절차까지 투자자가 가장 어려워했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투자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통합계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문·영문으로 공개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최종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하나의 계좌로 한국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미국·중국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거래내역 T+2 보고 의무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올해 4월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하나증권-Emperor증권'을 통해 첫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됐고, 이후 삼성·유안타증권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준비에 나선 상태다.

가이드라인에는 통합계좌 개설·운영과 관련된 주요 절차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국내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상임대리인을 통해 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최종적으로 통합계좌를 개설한다. 계약서에는 한국 감독당국 요청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제출 의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주권리 행사 방식도 명확해졌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이 일괄 배정한 배당 권리를 투자자별 보유 수량에 맞춰 분배한다. 의결권 행사 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불통일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최종투자자의 거래 기록을 10년간 보관하고, 매월 말 기준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제재 이력, 감독당국 인가 여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내부통제 사항을 사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통합계좌 개설 주체를 제한했던 금융투자업규정도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규제 특례가 없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자유롭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규정 개정으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